

# “노동 존중”? 노동 무시!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 구조조정 중단! 최저임금 개악 반대!



알렉스  
캘리닉스 논평  
북·미 정상회담  
배경과 전망  
7면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합의보다 이행이  
진정한 문제  
6~7면

문재인 정부 1년  
촛불 염원과 자본주의  
수호 사이에서 줄타기  
3면

노동자 투쟁 소식  
현대중공업노조, 파업 결의 12면  
서울대병원노조, 간접고용 투쟁 11면  
세종호텔노조, 탄압 반대 투쟁 11면

한국GM  
노조가 양보했어도  
구조조정은 계속될 듯  
5면

현대차노조  
하부영 집행부의  
'투쟁 해악' 발언 비판  
10면

마르크스 탄생  
200년  
마르크스는 왜  
노동계급을  
주목했나  
9면

# 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박근혜가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박근혜의 착취와 억압 강화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그들이다.

법원은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1심 재판 중이다. 두 지도자의 죄목은 민주노총 파업, 민중총궐기 집회,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 조직이다.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주도한 것이 자본주의 법정에서는 중죄가 된다.

반면, 법원은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을 석방했다. 촛불 운동이 박근혜와 함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한 이재용이다. 법원은 심지어 이재용의 수습역 달려 규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 문재인의 허언

문재인은 야당 후보 시절(2016년 11월) 한상균 전 위원장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바 있다. 대통령이 된 직후(2017년 9월)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눈에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들은 허언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난해 연말 특별사면에서 한상균 전 위원장을 배제했겠는가.



사용자 계급 눈치 보며 노동운동 지도자 볼모로 잡고 있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특별사면에 '노동 사범'을 포함하면 “사회 통합보다 분열”을 촉진할 수 있어서라고 정권의 본심을 말했다. 쉽게 말해, 사용자 계급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등 기업주 언론들은 민주노총의 “촛불 청구서”니 뭐니 하며 한 전 위원장 석방 요구를 반대해 왔다. 우익은 한상균 전 위원장의 석방이

노동자 저항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줄까 봐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촛불에 빚진 정부를 상대로 “촛불 청구서”를 내밀 충분한 자격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상균 전 위원장 사면 요구를 외면한 데 이어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를 국정’의 파

트너’로 삼겠다고 했다. ‘국정 파트너’라고 거하게 포장된 말을 노동계급의 언어로 풀이하면, 민주노총 지도자들에게 계급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자본가들의 이윤 증대 노력에 노동계급이 협조하라는 것이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볼모로 잡고 있다.

민중의 힘으로 박근혜를 쫓아냈는데, 박근혜에 맞서 일찍부터 완강하게 저항해 온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바뀐 정권에서도 여전히 옥중에 있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사회’가 빛 좋은 개살구임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김인식

## 최저임금 인상률 낮추려는 궤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할 경우 한국의 최저임금은 사실상 시급 9045원으로 OECD 국가 중 3위며, 미국·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내놨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노동자에게 주 1회 유급 휴일을 부여해 하루 치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일주일의 최소한 하루는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실, 주 5일제에서는 유급 휴일이 주당 2일이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시행될 때 사용자들이 완강하게 반대해 유급 휴일을 더 늘리지 못했다.

그런데 반쪽뿐인 하루 주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알바노조(2017)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92퍼센트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노동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사용자들이 주휴수당은 빼고 (일한 시간만)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 기준뿐 아니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 기준도 함께 알려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게다가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해도 157만 3770원밖에 안 된다. 비혼 단신 노동자의 평균생계비 175만 2898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최저임금위원회 자료, 2016년 기준)

## 경계 늦추지 말고 투쟁 조직해야

최저임금이 높다는 사용자와 보수 언론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다. 그들이 억지 주장을 펴는 이유는 명백하다. 우선,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가 재개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서 인

상률을 낮추려는 것이다.

현재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고, 6월 지방선거도 있으니, 최저임금 제도 개악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라며 이를 비난하고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과 합의할 수도 있다.

정부·여당이 자영업자들의 표를 의식해 지방선거 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려는 시도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호응해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화답해 왔다.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올해 사용자들의 갖은 꾀수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관건은 국회나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테이블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이다.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막고 1만 원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 산하 주요 노조들이 최저임금 투쟁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장우성

##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1957명 이윤 논리에 노동자 안전은 뒷전

문재인은 “2020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957명으로 전년 대비 10.1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매우 미흡하다. 건설기계,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적용대상에서 배제됐고, 작업중지권 발동 같은 노동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작업중지명령은 사측의 작업 재개 요청으로 빠르게 해제되기 일쑤다.

산업안전법 상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이 있긴 하다. 하지만 나중에 회사가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심지어 수억 원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현실에서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유해한 작업환경 속에서 건강과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도 계속 늘고 있다. 2017년 산업재해 사망자 중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85명이 증가해 993명이었다. 그러나 기업주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하고,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에 백혈병과 림프종에 걸린 삼성 노동자와 유족들이 작업장 유해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정보 고서’를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자 삼성 사측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국가기밀’이라며 삼성을 편들고 나섰다.

안전을 위해 외주화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8 최악의 살인기업’ 1위로 선정된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5위권에 든 기업 7곳에서 사망한 노동자 37명은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의 통계).

또, 과로와 장시간 노동도 노동자들의 목숨을 위협한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노동자 3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26명이 과로사·과로자살로 추정된다.

정부가 말하는 ‘안전 사회’를 외쳐도, 실상은 기업의 이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노동자들이 이런 정신 나간 우선순위에 맞서 강력하게 싸우는 것이다.

장우성

기사 전문은 온라인을 보시오.

문재인 1년

# 촛불 염원과 자본주의 수호 사이에서 줄타기해 온 모순투성이 정부

김문성

4월 중순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 낙마하고 실세 김경수가 여론 조작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위기를 맞았다. 둘 다 부패 문제이고, 마침 노동계 일각에서도 불만이 빠르게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큰 지지를 받으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말폭탄”이 오가며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던 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격세지감을 느낄 만하다.

우파는 레드 콤플렉스 효과가 악화되는 것이 짜증스럽고, 코앞의 지방선거도 걱정이 돼 신경질을 부리지만 당장은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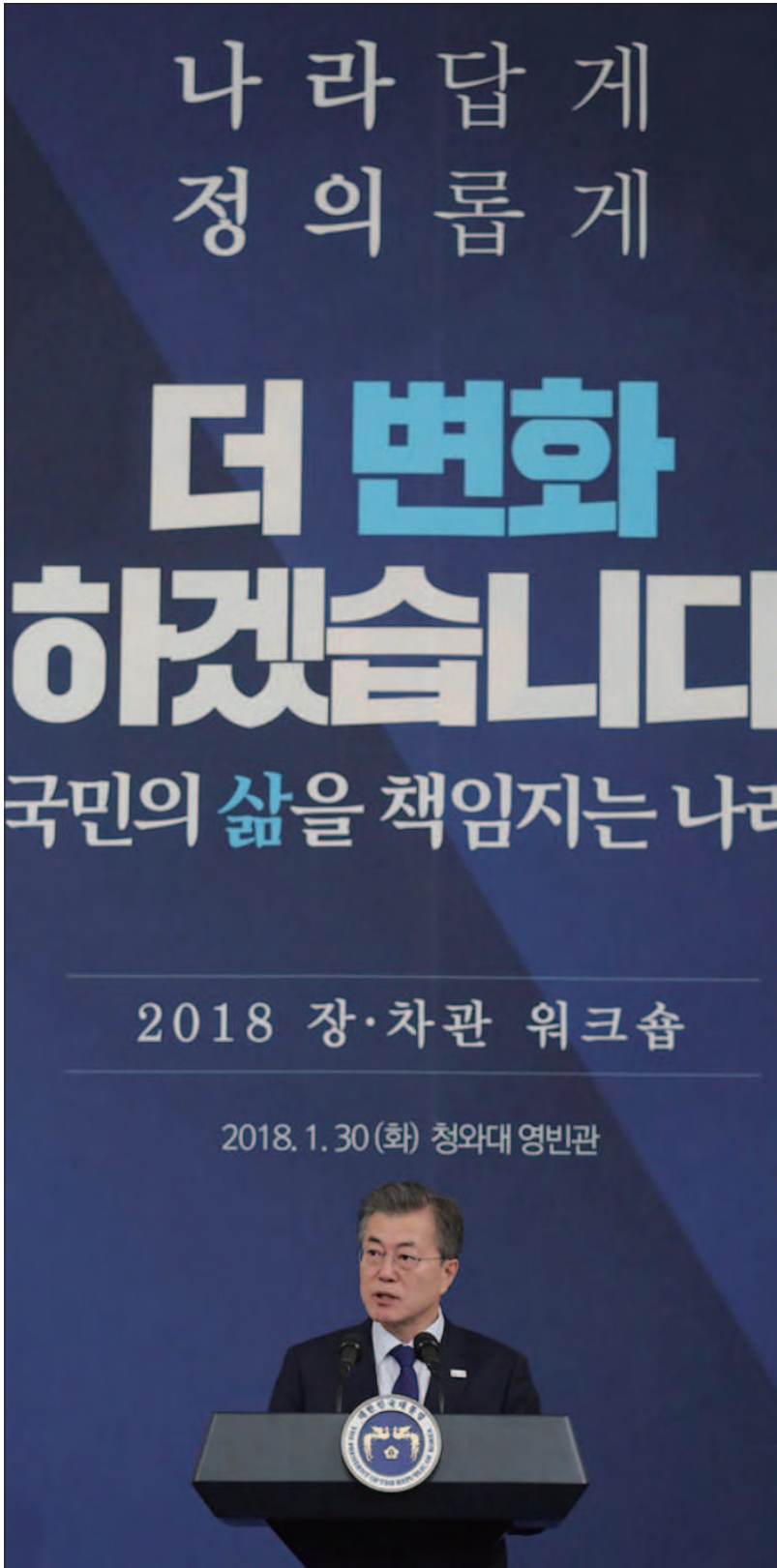
문재인은 정상회담 결과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 받았으며 우파 야당들을 압박했다.

그런데 정상회담 나흘 전 정부는 사드 기지 시설 공사를 위해 성주 주민들을 폭력 진압했다. 사드는 박근혜의 대표 적폐로 여겨져 왔고, 정부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밝혀 왔다. 전쟁이 끝났다는 정상회담 합의와 사드 배치는 배치된다.

사실 이런 식의 모순과 뒤집기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본 문재인인의 진정한 모습이다.

김정은과 민족 화합의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면서도, 같은 민족의 노동자 구성원들에게는 냉정했다. 3월 말 한국GM, 금호타이어, STX조선소 등에서 노동자 구조조정이 줄줄이 문제가 됐을 때, “정부는 절대 정치적 논리로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경련 대변자인 〈한국경제〉는 사실에서 이 발언을 극찬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취임 후 첫 업무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있는 일자리 수만 개가 날아가는 것을 외면한 것이다.



## 개혁 조처는 굶뎠이, 개혁 성과 기만은 “만리마”

지난해 5월 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했다. “구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촛불 운동의 적폐 청산 염원에 부응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다. “[오늘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 …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이다.”

“적폐”는 정치적 용어로 바뀌 말하면 반노동·친기업·친제국주의 정책들과 특권층 우대 관행들이다. 그러므로 “적폐 청산”은 노동자·민중을 억압한 우파 통치자들을 응징해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다. 진정한 정의 실현인 것이다. 노동자·민중은 요구할 자격이 충분하다. 우리 스스로 우파 정권을 끝내버렸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봄 더 나은 현실적 대안이 공식 정치에 없었기 때문에, 촛불을 지지한

다고 말한(말뿐인데도) 새 정부에 적폐 청산의 기대가 투영된 것이다.

그런데 우파는 위에 언급된 악행을 포기할 리 없다. 그러므로,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 한국 껄렁의 조사 결과를 봐도, 60퍼센트가 넘는 지지(긍정 평가)층에서 지난해 지지 이유 1순위는 줄곧 ‘적폐 청산’이었다. 반대로 부정 평가층에서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과거사 들춰/보복 정치”가 많이 꼽혔다.

이를 뒤집어 보면, 문재인 정부가 계속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적폐 세력과 타협하거나 스스로 적폐를 쌓으면 우파가 되살아나고 지지층이 급속하게 이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위기라고 할 지난해 9월이 바로 그런 상황을 미리 힌트 보여 줬다. 그 시기에 문재인은 경북 성주에서 사드 배치를 완료하려 주민들을 폭력 진압했다. 국방장관이 나서

서 김정은은 참수 부대 창설 운운했다.

또, 여당은 헌법재판소 내 유일한 개혁파 김이수 재판을 헌재소장에 임명하는 데에 실패했다. 개혁 인사라고 헌법재판관에 추천된 이유정은 “비상장 주식 대박” 특혜가 드러나 사퇴했다. 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이 나서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 완화와 민영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바람을 잡았다.

반면,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 수배 해제, 쉬운 해고 등 노동부 2대 지침 폐기,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처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 대통령 권한으로 즉시 시행될 수 있는 일들이 취임 반년이 되도록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적폐 청산이 지지부진해 노동자·민중의 염원에 역행한 것이 위기를 부른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면 또 그럴 것이다.

## 정국 주도를 위한 줄타기

과거 김대중·노무현 민주당 정부는 친제국주의·친시장 정책을 폈다. 지배계급 내에서 헤게모니를 쥐지는 못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당시 전신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주들과 국가관료 등 지배계급의 지지를 받는 차선책 정당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유다.

현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다음 선거를 의식해 우파 정책들에 반대하곤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시점에 가면 기업주들(과 그들의 언론)의 압력에 은근슬쩍 꼬리를 내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사실 수천 번도 더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우파의 엄살과 달리) 지나쳐서가 아니

라 촛불의 염원에 크게 못 미쳐 문제다. 민주당이 지배계급 내에서 헤게모니를 쥐려면,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지배계급에 보여 줘야 한다. 문재인은 구 여권을 공격하는 데에는 촛불의 염원을 활용하지만, 행여나 적폐 청산이 실질적이 돼 노동계급의 자신감과 행동을 자극할까 봐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임금 개악 등 적폐로 지목된 정책들을 맴시있게 다시 추진해야 하는 문재인에게는 사회적 대화가 반발을 최소화할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개혁 약속을 파기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외양을 갖추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든 반복될수록 약발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 평화와 번영 — 누구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문재인인의 친미 행보가 재평가되는 분위기이지만, 그는 취임사에서 평화와 안보에 대해서도 모순된 약속을 했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반도 위기의 배경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 경쟁에 있고, 한미(일)동맹은 군사동맹이기도 하므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은 미국이 호전적일 땐 양립할 수 없다.

평화와 한미동맹의 결합은 군사주의, 즉 전쟁용 무기의 증강으로 나타난

다. 한국 지배자들이 “평화”와 “번영”을 한미동맹의 공고화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청와대에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부터 이런 국가전략에 이견이 없었다.

지난해, 유사시 파병을 약속했다는 이명박의 UAE 원전 외교 의혹을 덮어버리고 UAE 왕정과 협력을 강화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UAE는 친미 국가이고, 이런 군사외교를 통해 한국도 중동에서 미국을 도우며 자체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게 노무현—문재인의 기본 접근법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미사일탄두 중량 해제에도 트럼프와 합의했다.

## 문재인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집권 1년이 된 시점에서 개혁 수행평가를 해 보면 이런 모순들이 잘 드러난다.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다며 작은 개혁을 제공하지만, 이내 그것을 상쇄할 개악에 손을 댈다. 저항이 거세면 개악을 미루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악이 바로 집행된다.

2월 말 근로기준법 개악이 그런 경우다. 노동계 지도자들이 말로 반대는 하지만 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직할 의사는 없어 보이자, 개악이 강행됐다.

공공부문 현장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지난해부터 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비교아 부른다.

문재인 취임 후 반년이 훌쩍 지나서야 노동부는 공식 사과를 하고 노동계약 행정지침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했다. 그러나 비슷한 직무 성과급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던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더니, 뒤에서는 공무원노조에 (박근혜 정부처럼) 해고자 배제 규약 개악을 강요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평균보다 많이 올렸다. 그러나 얼마안가, 기업주들이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케 하거나 상쇄시킬 개악에 나섰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했다(문재인 케어). 하지만 시행 반 년도 안 돼 후퇴하고 있다(관련 기사 : ‘시행한 지 반 년도 안 돼 후퇴하는 문재인케어’). 보험료를 올려 노동계급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반감시켰다. 정부 예산을 소득과 복지 확대에 대폭 투입하는 것도 아니다.

▶ 4면으로 이어짐

# 문재인 정부와 조선일보사의 드루킹 기사

김문성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4월 25일 경찰이 TV조선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협의를 TV조선 기자가 드루킹의 노트북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태블릿PC와 USB 등을 훔친 것이다. 우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TV조선이 ‘오버’한 데 이어 경찰도 ‘오버’한 듯하다.

TV조선 기자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TV조선은 압수수색 전에 이미 절도 사실을 공개 인정하고 문제의 태블릿PC 등은 물론이고 해당 기자의 노트북, 휴대전화까지 경찰에 제출했었다.

그것만 가지고도 조직적 절도 여부를 알아내는 데에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왜 TV조선 압수수색 시도 퍼포먼스를 했을까?

경찰청장 이철성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권력기관 수장 중 거의 유일한 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찰은 김경수-드루킹의 여론 공작 유착 수사에서 줄곧 여권 좌주기 수사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경찰의 압수수색 퍼포먼스는 TV조선과 우파를 정치적으로 압박할 의도였던 듯하다. TV조선은 드루킹 사건을 최초 보도한 매체다. 압수수색 대처로 절도 혐의를 부각시켜 드루킹 사건이 우파의 문재인 정부 흡입내기 공세로 비쳐지게 하고, 우파와 TV조선이 정부 비판과 폭로를 하기 부담스럽게 만들려 한 듯하다.

게다가 최근 검찰 내에서 고故 장자연 사건을 재수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공교롭게도 고故 장자연이 접대 강요를 받아 만났던 조선일보 쪽 고위 인사가 TV조선의 현 대표이사 방정호로 알려져 있다. 그는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의 아들이다.

TV조선의 드루킹 사건 보도와 고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움직임 중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반작용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럼에도 최근 상황이 현 정부와 조선일보사가 기싸움을 벌인 것임은 알 수 있다. 지배계급 내 쟁투가 매우 치열한 것이다.

십년 넘게 친노 인사들은 노무현 정부가 언론 때문에 실패했다고 평가해 왔다. 문재인 정부도 여론 동향을 중시해 왔다. 그러므로 고故 장자연 사건 수사는 보수 언론을 압박할 유용한 카드인 셈이다.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커녕 고故 장자연 씨의 죽음을 정치적 이해 다툼의 소재로 전락시킨 지배자들의 냉소가 메스껍다. 물론 조선일보사도 김경수의혹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경찰과 TV조선 기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 드루킹 사건은 민주당 판 온라인 여론 공작

드루킹이 민주당이나 친문 정치 그룹들과 관계 없다거나 심지어 둘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쟁점 몰타기 변호론이 유행하고 있다.

강경 친노친문 인사들의 지지를 받는 한 팟캐스트 운영자는 드루킹이 노사모 시절부터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폭로했다. 물론 드루킹이 도참(서)을 번역해 블로그에 올린 것은 기인스럽다. 그러나 그가 정치 블로거로 명성을 얻은 것은 친노친문 성향의 정치적 주장들이었다.

또한 기이함으로 말하면, 4년째 세월호 고의침몰설을 유포하거나 좌·우가 합작해 친노 정부를 괴롭힌다는 음모론적 가짜 서사(‘피해자 코스프레’)를 뻘뻘하게 유포하는 친노친문 인사들도 막상막하이다.

오히려 친문 진영에서 진짜 친문 감별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판 온라인

여론 공작에 여러 팀들이 경쟁적으로 입했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다.

이들의 글을 보면, 가령 친노비문 인사 안희정이나 비노친문 인사 추미애에 대한 태도는 엇갈려도, 비노비문 인사 박원순, 이재명, 정의당과 심상정 공격이나 좌파와 노동단체 공격에 대해서는 일치했고 그 양상은 (우파 못지 않게) 아비했다.

이명박근혜 시절 정부 기관이 한 것과 다르다는 것은 형식 논리다. 정부 비판적 의견이나 진보·좌파에 대한 조직적 여론 공작이라는 본질에서는 우파가 별인 일과 같다. 팟캐스트 등의 매체를 통해 담론과 지지층을 형성하고 카페 등을 통해 지침을 공유해 SNS에서 활용하는 패턴도 같다.

문재인 비판 글들에 “따역따”로 표현된 온라인 좌파 찌기(리더가 특정 기사에 평을 달아 띄우면 물려가서 댓글을

달거나 특정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집중해서 누르는 것) 공격이나 민주노총이나 좌파 노동단체들에 대한 음해(“가짜뉴스” 유포 등) 등이 그랬다. 대선 직후 문재인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면 난데없이 경북 성주 주민들을 비난 대상으로 삼은 것이나 민주노총이 이명박을 지지했다며 음해한 것이 그런 사례다.

물론 이런 온라인 공격이 기층 여론에 미친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후 행보를 보면 이런 공격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조직적으로 행해진 것임을 능히 간파할 수 있다.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는 기술적 수단일 뿐이다.

그러므로 친민주당 개혁주의 언론인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댓글 조작을 한 사람보다 (광고 수익을 위해) 뉴스 포털 기사 배치 등을 임의로 하고 댓글 조작이 가능케 방치한 네이버를

본질적인 문제로 취급한 것은 일면만 강조해 진실을 가리는 일이다.

여러 변호론이 무색하게도 소극적이기 짝이 없는 경찰 수사에서조차 김경수 측과 드루킹의 거래 관계가 입증되고 있다. 둘 사이에 온라인 관련 ‘주문’과 ‘보고’가 오갔음도 드러났다.

둘은 텔레그램보다 보안성이 더 높아 NSA의 전 세계 감시 활동을 폭로한 스노든도 사용한다는 시그널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그러니 김경수와 드루킹의 유착이 수사로 밝혀지지 않으면 ‘시그널’만 홍보해 준 셈이다!)

드루킹 측이 김경수의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물론 이를 김경수가 알았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오히려 김경수와 관련된 압수수색 등 수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절차일 텐데, 경찰과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 검·경 신경전은 여권 내분의 징후

김경수-드루킹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최근 날카롭게 신경전을 펼쳤다. 둘 다 수사를 성의없이 한 건 마찬가지인데도 말이다.

경찰은 김경수의 통신기록과 금융거래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반박했다.

서로 정권과 코드를 잘 맞추고 있는 두 권력기관 사이의 갈등은 근저에 수

사권 조정 문제가 한 요인인 듯하다. 공교롭게도 수사권 조정 논란만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일방 수사 지휘가 아니라 상호 견제하는 관계처럼 되고 있다. 경찰이 결코 검찰의 단순 하위 파트너가 아님을 시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더 확립하는 개혁을 약속해 왔다. 그 가운데는 자본주의 국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 포

함돼 있다.

그런데 이런 지향성이 최근의 여야 갈등과 맞물려 권력기관 간 쟁투로 표현된 듯하다. 이런 일은 장차 정치 위기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유지돼 지방선거 전망이 밝은 것처럼 보이자 공천을 둘러싼 갈등도 심하다. 가령 친문 진영 일부는 비노비문 인사 이재명이 친문 핵심인 전해철을 제치고 경기도

지사 후보가 되자 오히려 이재명 음해에 나서고 있다.

정부 지지율은 높지만, 김기식 사퇴, 김경수-드루킹 특검은 과반이 지지했다. 묻지마 지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고공 행진 밑에는 정치적 마그마가 있다. 좌파(진정한 진보파)는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인 좌파 정치, 계급정치를 구현하려 애써야 한다.

### ▶ 3면에서 이어짐

소득주도성장론은 결국 이간질일 뿐인 듯하다. 대기업 노동자가 임금을 억제하고 고용 유연화를 받아들여야 영세 소득자에게도 일자리와 소득이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경 역사 교과서는 전광석화처럼 폐기했다. 또한 4·3을 명예회복

시키겠다고 했다. 내년에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겠다고 한다. 우파 야당이자 구 여권과 차별화함과 동시에, 진보적·중도적 민족주의 세력을 포섭하기 위한 제스처일 것이다.

개혁과 반동의 이런 배합이 치열한 권력 투쟁과 모순을 거치지 않고 이뤄질 수는 없다. 촛불의 여파가 지속되는

한, 문재인은 권력 투쟁 과정에서 촛불 정부라는 언사를 계속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촛불의 진정한 주역을 주역 대접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폐 청산하랬더니 적폐 세력과 타협과 대화로 해결하자는 게 딱 그런 식이다. 믿고 기다려서는 얻을 것이 없다.

문재인이 촛불 염원을 대변하는 듯 말하는 것을 운동이 활용할 수 있는 경

우는 오직 스스로 정취하려고 투쟁을 해 온 때만 가능하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나 재벌 개혁 분위기를 이용해 공공부문이나 삼성에서 새롭게 노조 조직화가 진전되는 것이 이런 사례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보수 세력 견제를 이유로 독자적인 행동을 자제한다면 운동은 기회를 놓치고 대중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우파가 다시 득세하는 일을 막겠으며 운동이 문재인 정부와의 협력에 매달릴수록 위험해질 것이다. 문재인은 지지자들을 결국 실망시킬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보수 우파도 반사이익을 일시 얻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진보·좌파 세력이 문재인과는 다른 대안으로 비쳐지도록 독립적인 세력과 저항을 구축하는 것이다.

## 한국GM 구조조정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했지만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강동훈

4월 27일 산업은행과 GM 본사가 한국GM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GM, 금호타이어, STX조선·성동조선 등에서 벌어진 구조조정 국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GM에 대한 최종 실사 보고서가 나오는 5월까지 산은과 GM이 자금 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

산은과 GM은 한국GM에 총 70억 5000만 달러를 투입하는데, 이 중 63억 달러(6조 8000억 원)는 GM이, 나머지 7억 5000만 달러(8100억 원)는 산은이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그 대신 GM은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에 신차 두 종을 배정하는 등 한국GM의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산은은 GM의 한국 철수를 막을 ‘비토권’을 다시 얻기로 했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한국GM 노동자들은 또다시 고통을 전담하게 됐다.

이미 한국GM 노동자들은 수년간 조업 단축 등으로 임금이 대폭 삭감된 상태였다. 그래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GM과 정부 책임은 없고, 노동자에게만 고통이 전가됐다

비중이 국내의 다른 완성차들보다 낮았다.

여기에 군산 공장 폐쇄와 2500여 명 ‘희망퇴직’, 임금 동결과 성과급 삭감, 복리후생 축소가 더해졌다. 한평생을 바쳐 온 직장에서 ‘희망퇴직’으로 밀려난 절망감 때문에 한국GM 노동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GM 사측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매년 4000억~5000억 원의 비용을 절감

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반면, 자신의 책임은 최대한 회피했다.

한국GM 경영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인 ‘대주주 차등 감자’를 GM은 한사코 거부했다. GM은 한국GM에서 받아야 할 차입금 27억 달러를 출자전환 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GM이 그동안 한국GM에서 빼간 돈을 되돌려놓는 것일 뿐이다.

앞으로 10년간 36억 달러를 투자하

겠다는 것도 ‘약속’일 뿐이다. GM은 2013년에도 신규 투자 8조 원을 약속했지만 그동안 투자는 커녕 빚만 늘었다.

불확실한 미래와  
계속될 구조조정

산업은행은 경영 실사를 통해 한국GM의 원가구조 등을 살펴보고 싶었지만, GM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도 한국GM에서

돈을 빼가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GM은 2019년 말부터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을 부평 공장에서, 2022년부터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을 창원 공장에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확실한 계획일 뿐이다. 특히, 창원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CUV는 4년 뒤에 생산할 예정이라 아직 차체 디자인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상 속의 차’다.

과거에도 GM은 신차 투입을 약속했다가 말을 뒤집은 적이 있다. 2014년 8월 임단협을 통해 군산 공장에서 크루즈를 생산하겠다고 합의했으나, 불과 몇 달 뒤인 2014년 말 ‘교대제를 개편해야 신차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었다. 결국 비정규직 700여 명이 해고됐다.

부평 2공장에는 현재 생산 중인 말리부 후속 모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불안정한 세계경제 변화에 따라 GM을 비롯한 세계 자동차 기업들의 경영 전략도 몇 년 만에 바뀌곤 한다. 경영 전략 변화에 따라 GM의 약속은 얼마든지 공수표가 될 수 있다.

노동자 양보만 강요한  
문재인 정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했다.

성동조선·STX조선 구조조정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해고와 임금 삭감을 추진했다.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성동조선 노동자 1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됐다.

STX조선에 대해서도 생산직 75퍼센트를 해고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협박해, 결국 노동자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삭감됐다. 게다가 해고는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도 STX조선 사측은 최근 외주화 계획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매각 때도 마찬가지였다. 노조가 계속 버티자 산은은 “청와대가 와도 (파산은) 못 막는다”며 양보를 종용했다. “금호타이어가 쌍용차 동차의 고통과 슬픔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던 대선 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고, 노동자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GM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임단협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산은 회장 이동걸은 노조가 만나자고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내가 노조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거들 얘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여당이 GM 사측과 구조조정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음이 드러났다.

임단협 막바지에 산은 회장 이동걸은 아예 교섭 자리에 노사와 함께 참석하겠다고 나섰다. 노조는 이동걸이 교섭장에 참석하려 하는지도 몰랐는데, GM 사측은 이미 정부와 얘기를 마치고 교섭장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명패까지 준비해 올려 놓았다고 한다.

반면, 정부는 GM 사측의 책임을 묻는 데는 열의가 없었다.

애초에 정부는 ‘대주주 책임론’을 내세우며 GM 소유의 한국GM 주식에 대해 차등 감자를 요구했지만, GM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더 나아가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실사보고서가 완료된 5월에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중간 실사 결과가 긍정적이라며 지원 약속을 4월 말로 앞당겼다. GM이 실사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니 산업은행이 ‘비토권’을 다시 얻는다 한들, GM을 제대로 감시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데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힘들다.

## 양보 교섭으로는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

그동안 한국GM 노조 지도부가 임금 동결 등을 약속하고, ‘희망퇴직’ 실시에 강하게 맞서 싸우지 않으면서 거듭 후퇴해 온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GM 노조 지도부는 교섭에 들어가면서 이미 임금 동결과 성과급 반납을 양보했고, ‘희망퇴직’에도 강하게 맞서지 않았다. 그러나 사측은 복리후생비 1000억 원 삭감이라는 더한층의 양보를 요구했다. 결국 한국GM 노조 지도부는 군산 공장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군산 공장 폐쇄와 복리후생비 추가 삭감까지 동의해 줬다.

금호타이어 노조 지도부도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는 투쟁을 일으키려 애쓰기보다 국내에서 인수할 기업을 찾는 데 힘을 쏟았다. 노동자들의 조건이 어느 정도 희생되더라도 국내 매각이 대안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다가 물밑에서 인수 의향을 밝힌 국내 기업이 인수를 포기하자 곧바로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나 본지가 주장해 왔듯이, 노조가 거듭 양보해도 고용 불안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킨다.(관련 기사: 232호 ‘어떻게 GM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는가?’를 보시오.)

예를 들어, 지난 수십 년간 GM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조건 악화를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시켜 왔다. 미국이나 유럽, 호주 등지에서 노조 지

도자들은 일자리를 지키려면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 등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호주 노조 지도자들도 GM의 “생산성 향상” 요구를 충족시켜야 공장 폐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로 양보를 거듭했다.

그러나 거듭된 양보는 노동자들을 더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았고, 조건 하락과 인원 감축으로 노동자들은 싸울 자신이 점점 없어진 경우가 많았다.

절정기에 2만 4000여 명이었던 호주 GM 노동자 수는 계속 감소했고, 결국 GM이 2013년 공장 철수를 결정했을 때는 이미 거듭된 양보로 조직력과 저항력이 약화돼 제대로 맞서 싸울 수 없었다.

## 진정한 대안

사용자의 비용 절감 추진에 협조해 회사부터 살리는 게 결코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 지난 수십년 동안 구조조정을 겪은 전 세계 노동자들이 경험한 진실이다. 일자리를 지키려면 사용자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한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 노동자들이 공장 폐쇄·철수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일자리를 지킬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부도·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국유기업화 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며 싸우는 것이다.

국유기업화는 결코 비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실업 수준이 “국가 재난 수준”이라며 수조 원의 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다. 또, GM에 8100억 원을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여러 특혜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돈은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데가 아니라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데부터 쓰여야 한다.

국유기업화를 쟁취하려면 점거파업 같은 단호한 투쟁과 연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점거파업은 부도 위기에 처해서 파업이 생산에 가하는 타격이 덜한 조건에서도 노동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정치적 연대의 초점을 형성하는 데서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다.(본지 242호 ‘국유기업화를 쟁취할 유일한 수단 - 점거와 연대의 결합’을 보시오.)

**추천 소책자**

한국GM, 중형 조선소 구조조정  
**공장 폐쇄·부도 위험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것인가?**

강동훈, 김지태, 김하영, 박설 지음,  
노동자연대, 108쪽, 3,000원

# 정상회담과 지금의 국제 정세

김영익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사흘 전인 4월 24일, 미군 전략 폭격기 B-52H 2기가 대만 인근 해역과 남중국해 일대를 돌았다. 회담 전날인 26일에는 중국 폭격기 편대가 미군 폭격기가 지나간 곳과 같은 지역에 출현했다. 중국 공군은 이것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유지 능력을 단련”하기 위한 “대만섬 일주 비행”이라고 했다.

이 일은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사례의 하나다.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쟁은 대만 문제뿐 아니라, 무역, 군사 등 다방면에서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며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뿐 아니라 유럽, 북미, 동아시아 모두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일본 등의 무역 갈등과 달리,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지정학적 경쟁과 맞물리면서 훨씬 더 위험한 형태로 발전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트럼프가 신경 써야 할 곳은 단지 동아시아만이 아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중동, 유럽 등지에서도 미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동 상황은 혼란 그 자체다. 4월 13일 미국은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를 공습했다. 그러나 오바마

처럼 트럼프도 중동에 대한 대규모 군사 개입을 꺼린다. 그에게는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중동에 발을 더 깊숙이 넣을 수도 없지만 완전히 뺄 수도 없다.

물론 트럼프 자신이 중동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그는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강행하려 한다. 또한 이란의 영향력 제고를 막겠다면서 프랑스, 독일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 핵합의를 폐기할 것 같다.

트럼프의 이런 행동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듯하다. 서방이 무장시킨 국가인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중동에서 서방, 특히 미국을 대신해 전쟁을 하는 구실을 맡았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란을 제압하고 싶어 안달이다. 4월 26일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시리아에서 부딪힐 확률이 커졌다고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기사 ‘시리아 사태,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를 보시오.)

## 전환

중동의 불안정은 동아시아의 갈등이 급격히 대화 국면으로 바뀌는 데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준 듯하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이 남한·일본에게 보복을 할 가능성 때문에 대북 선제 타격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겠지만, 중동 문제로 한반도에 오롯이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의 기성 안보 기구들



27일 공동 선언 발표 후 악수하는 남북 정상들

의 노선과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점은, 그가 파격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받아들이는 데서도 확인된다.

그의 이런 급전환 때문에 일본 총리 아베가 뜻밖의 타격을 입었다. 아베는 그동안 트럼프와 함께 대북 강경론을 펴 왔는데, 지금 그는 미국의 무역 공세 대처에 실패한 데 이어 북핵 외교에서 마저 소외됐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다. 이와 맞물려 각종 부패 추문이 다시 폭로되면서 트럼프의 “훌륭한 친구”

아베는 궁지에 몰렸다.

그러나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매우 불안정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미·중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불안정을 높이고 있다. 4월 10일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경제논설위원 마틴 울프는 이렇게 지적했다. “만약 두 국가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들은 상대방뿐 아니라 전 세계를 파괴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이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그래서 미국이 중동의 혼란을 의식하며 북한과 대화하는 상황이 영구히 가지 않을 것인 데다 중국과의 경쟁이 악화할수록 패권을 위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모험을 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북·미 정상회담들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체제를 보장해 주리라 기대할 게 못 된다. 노동자 운동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반제국주의적 한반도 평화 운동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

##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불과 다섯 달 전, 한 북한 군인이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에 오려고 목숨을 걸어야 했다. 그만큼 남북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군사분계선은 정말 넘기 어려운 분단 장벽이다.

그러나 4월 27일 남북의 두 정상은 두 손을 맞잡고 그 선을 쉽게 넘나 들었다. 적잖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며 “평화, 새로운 시작”을 염원했을 것이다.

대결과 적대보다 남·북한이 서로 화해를 다짐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반대할 자는 홍준표 같은 한 줌의 우익들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은 “평화의 시대”를 여는 데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판문점 선언의 문구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남북 당국들이 합의에 이르기보다 그 합의를 이행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임을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남북 화해·협력 문제에서도 주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의식해야 하는 엄중한 현실도 눈에 들어온다.

## 재확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 상당수는 과거 남북이 약속한 바를 재확인하거나 이를 좀 더 구체화한 것

이다(표 참조). 그중 남북이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의무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이미 언급됐고, 그 후에도 남북이 주요 회담에서 거듭 다짐한 것이다.

그러나 다짐은 늘 지켜지지 않았다. 거슬러 올라가면, 남북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대결과 적대 과정에서 협정을 번번이 어겼다. 사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는 남북이 지난 65년 동안 정전협정의 비무장지대 설정을 완전히 무시해 왔음을 웅변해 준다.

합의보다 이행이 더 중요하다는 점은 남북 두 정상도 의식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피력해 왔다.

그러나 역대 남북 합의가 거듭 휴지 조각이 된 주된 배경에 주변 제국주의 국가들의 관여와 경쟁이 만드는 국제정세의 변화, 즉 남북 두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국회 동의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근본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약속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실향민, 탈북자, 연평도 주민의 상처’를 언급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는 8·15 이산가족·친척 상봉 외에 자유 왕래 문제에서 명시된 게 없다. 자

유 왕래 문제는 남북 두 정상에게 우선 순위 문제가 아닌 것이다.

## 군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군축 문제를 다시 꼬집어냈다. 한반도는 치열한 군비 경쟁의 장이고, 특히 남한은 매년 엄청난 규모의 군비 증강을 해 육중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주는 부담을 고려한다면, 군축 언급은 많은 사람들이 반길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군축에 의지가 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우선, 판문점 선언의 ‘군축’ 선언에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없다. 그저 의지를 확인했을 뿐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당장에 첨단 전투기 F-35를 도입하는 등 대규모 군비 확장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북한만을 의식해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남한도 동아시아에서 점증하는 군비 경쟁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군비 증강은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추가 핵실험은 없다고 선언했다. 반면 남한은 대북 침공 계획을 반영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실시했다. 그리

고 경찰력을 동원해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적 공세를 강화하는 시기에는 어떤 것보다 한미동맹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일 텐데, 문재인 정부는 이 점에서 물러설 태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군비 확장과 한·미 군사협력 강화가 지속되는 한, 연내에 종전 선언에 이른다는 말을 이는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종전 선언을 거쳐 항구적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것은 북·미 관계의 진전 여부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로 여겨지는 까닭이다. 판문점 선언의 성공 여부도 결국 여기에 달렸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로 하면서, 사람들은 남북 합의를 불안하게 만들던 “미국 변수”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종전 등이 미국 등의 추인에 달려있음을 인정한 남북 정상회담 합의만 봐도 미국 변수는 늘면 늘었지, 줄지 않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미국과 북한의 줄다리기는 이제 시작이다. 게다가 아직 핵무기도 없는 이란과의 핵합의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도 파기 위협에 처한 것은 북핵 협상도 앞으로 우여곡절

이 많을 것임을 예고한다.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최대한의 압박”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폼페오, 볼턴 같은 대중·대북 강경 인사들을 외교·안보 책임자로 임명했다. “[이런 임명을 통해] 김정은과의 협상에서 ‘상생을 위한 주고받음’은 협상이 아니라 최소한을 내주고 최대한을 얻기 위한 ‘찍어 누르기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과시하려는 것이다.”(이삼성,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한길사, 703쪽)

무엇보다 미국에게 ‘북한 문제는 중국·일본 등 다른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단속하는 문제에 종속돼 있다. 미국도 스스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제국주의적 경쟁을 벌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미 협상의 미래는 기본적으로 불투명하다.

물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큰 틀의 합의에 이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의 이행과 검증은 매 단계마다 얽치락뒤치락할 것이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가늘고 긴 불확실한 과정이 될 공산이 크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더 이상 전쟁은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향한 한 국민들의 열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그 열망을 실현하는 동력은 정상 간 약속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2007년 10·4 남북 선언의 문구 비교

| 2018년 판문점 선언                                                                                               | 2007년 10·4 남북 선언                                                                    |
|------------------------------------------------------------------------------------------------------------|-------------------------------------------------------------------------------------|
| 남과 북은 …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 남과 북은 …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 불가침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
|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
| 남과 북은 …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해[기로 하였다.] |
|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 노력하기로 하였다.            |
| 남과 북은 …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 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

## 시장 번영이 곧 평화인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두 정상은 “평화” 못지 않게 “번영”을 강조했다. 이 점은 두 정상의 연설과 판문점 선언 곳곳에 반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자신이 공언해 온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진전시킬 계기로 삼고자 하는 듯하다. 경제 발전을 강조해 온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경제협력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된 경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제협력이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우선 남북 경험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인 듯하다.

이처럼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많은 여권 인사들이 시장을 통한 번영을 강조하는 데는 경제적 상호 의존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개량주의적 환상이 깔려 있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 의존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한다는 생각은 역사적으로도 제1차세계대전 등으로 반증됐고, 이론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당장 미국과 중국처럼 경제적으로 서로 크게 의존하는 최대 규모 경제들이 전쟁으로 치달을지도 모를 갈등을 빚는 것을 보라. 지정학적 경쟁을 자본주의 경제와 별개의 것으로 보는 통속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경제적 상호 의존이 경제

적 경쟁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지정학적 경쟁도 자본주의 경쟁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과거 남북 경험의 경험을 돌아봐도 경험 확대가 평화를 보장해 주지 못했다. 동쪽에서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는 와중에, 서쪽에서는 서해교전이 일어나곤 했다. 개성공단이 2010년 공단의 지척에서 연평도 상호 포격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 미국과 얽힌 정치·군사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경험이 평화를 보장해 주기는커녕 그 자체도 크게 진전되기 어렵다. 경험 사업 중에 국제 대북 제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게 거의 없다시피 하다.

## 김정은 위원장의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의 부친이 그랬듯이, 핵무기를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여는 지렛대로 활용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한이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자신감을 갖고 상황을 주도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북한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과시적으로 공개한다고 해서, 북한이 주변의 막강한 제국주의 국가들에 둘러싸였고 국내총생산이 남한의 2퍼센트 남짓한 국가라는 점을 가릴 수는 없다. 최근 강화된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를 더 어렵게 한 듯하다. 김정은 정권은 자본주의 세계 체제 속에서 여전히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처지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된 후, 김정은 위원장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환대를 받았다.(종신 집권의 길을 연 시진핑으로서는 같은 독재자의 방문을 환영

할 만한 정치적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베이징을 오가면서 김정은은 소련·중국 사이의 등거리 외교로 실리를 얻으려 했던 할아버지 김일성의 경험을 곱씹었을 것이다. 미국의 적대 정책 때문에 북한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입김이 커질 우려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무역 활성화와, 기업 자율화 같은 시장 개혁 조치로 경제 발전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국제 대북 제재 문제를 해결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트럼프와의 만남은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한판 도박으로 여겨질 듯하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메시

지를 전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한 일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면 북한은 주한미군을 “군사적 균형자”로 인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셈법은 이와 사뭇 다를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일본 등의 핵무장을 자극할까 우려하긴 하지만, 그간 미국은 북한 ‘위협’론을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동맹을 강화하고 대韓중 군사행동을 합리화하는 명분이 됐다. 당장 사드가 어떤 명분으로 한국에 들어왔는지를 떠올려 보라.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만날 것이고, 그 결과가 어찌될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이 여전히 북한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더 큰 장기판의 일부일 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중국에 간 닉슨”<sup>\*</sup>과 비슷한 일을 하려는 걸까? 상황을 보면 그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으로 북·미가 재앙적 전쟁으로 치닫는 대신 뜻밖의 외교적 성과를 볼 수도 있을 듯하다. 이는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통념을 뒤집는 일이다. 그들은 트럼프가 북핵 폐기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은 것이 실수라고 입을 모은다. 그런 반응을 보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는 게 위선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것이지, 미국도 포기한다는 게 아니다. 냉전 기간 거의 내내 주한미군은 핵무기를 보유했었다. 오늘날까지도 주한미군 2만 8000명이 남한에 주둔해 있고, 미국은 인근 바다와 상공에서 광범한 핵역량으로 그들을 지원한다. 스티븐슨공과대학교의 [핵무기 역사] 알렉스 웰러스턴은 〈옵서버〉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은 흔히 북한더러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할 수 있는 ‘가장 미친 짓’은 핵무기로 자신을 위협하는 적국을 앞에 두고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기업 간 국가 간 경쟁을 동력으로 삼는 자본주의 체제의 일그러진 합리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이 잔혹한 스탈린주의 독재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목적이 생존이라는 것도 보여 준다. 그래서 김정은은 1990년대에 거의 몰락한 북한 경제를 살리려고 민간 교역 활성화를 허용하며 경제 성장을 도모했다.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는 김정은의 악명 높고 무자비한 행동이 당과 군부 내 고위급 인사를 겨냥해 왔다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말했다. 김정은은 “오직 총을 든 사람들만 죽였다. … 경제 관리자는 단 한 명도 건드리지 않았다. 당신이 은행 경영자라면 안전한 것이다. 6년 동안 김정은은 국방장관[인민무력부장]을 7명이나 거느렸는데, 이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거느린 국방장관 수만큼 많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잣대로 보더라도 경제 성장은 부족하고, 그가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트럼프는 집권한 이래 계속해서 중국이 나서서 북핵 포기를 압박하라고 요구

했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은 소련을 대체해 북한 정권의 후견인 구실을 해 왔다. 2015년 중국은 북한 수입의 85퍼센트, 수출의 83퍼센트를 차지했다. 트럼프의 이런 요구가 성과를 거두는 듯하다. 무역 수치를 보면, 지난해 말까지 중국은 북한에 수출하던 석유·석탄·철강·차량 등 필수재 반입을 거의 차단했다. 동시에 북한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갑절로 커졌고 북한은 핵심 물품을 수입하려고 외환보유고를 써야 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이면 외환보유고가 바닥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김정은은 먼저 베이징행 방탄열차를 타고서 중국의 후견인 시진핑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남한 대통령 문재인과 첫 대면을 하고 이후 트럼프를 만나기로 했다. [북한과 미국] 양쪽 모두 이번 만남에 진지하다는 점은 CIA 국장이었다가 국무장관이 된 마이크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확인됐다. 이제 북한 지도자는 자신이 무엇을 양보할지 말하고 있다. 김정은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북한의 오랜 요구를 포기한 듯 보인다. 왜 미군이 한국 전쟁이 끝난 지 65년이 지나도록 여태 남아 있는 것인지 설명하기는커녕 아무도 묻지도 않는 실정이지만 말이다. 김정은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한국전쟁을 끝내자고 한다. 4월 21일에는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심 많은 이들은 북한이 더는 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핵·미사일 역량을 완성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재빨리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진척되더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을 끝내지는 못할 것이다. 트럼프에게 남한과 북한은 훨씬 큰 그 장기판의 줄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601호 / 번역 김종환

“중국에 간 닉슨”  
1972년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이전까지 적대 관계였던 중국을 방문해 당시 주석 마오쩌둥과 정상회담을 했고 양국 관계를 개선했다. 외교 관계에서 180도 전환을 가리킨다.



# 미·중 무역전쟁과 군사 갈등

김중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이 계속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4월 초 미국이 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중국도 비슷한 규모의 보복관세 계획을 내놨다. 미국은 다시 더 큰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그 뒤로 양국 정상이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이완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이내 미국은 중국 2위 통신장비 기업 중싱(ZTE)에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도 비슷한 제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자국에 수출 의존도가 큰 미국산 사탕수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많은 제재와 관세가 아직 시행된 것은 아니고 양국 고위급 대표단이 조만간 대화에 나서기로 하는 등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이런 갈등은

계속될 공산이 크다. 세계경제가 실제로 회복되지 못하고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갈등 중이다.

4월 초 미국과 중국이 같은 날 남중국해에서 저마다 항공모함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남북한 정상회담 직전인 24일에는 대만 인근에서 중국 전투기가 정찰 비행을 하고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 편대가 전개됐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대립하는 것은 우연도, 몇몇 정책적 오류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맞물리는 자본주의 동역학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앞선 경쟁력을 자랑했고, 미국 시장은 규모가 가장 컸다. 미국 지배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에 유리한 ‘국제 질서’를 구축했다. 미·소 간 냉전 상황에서 서구 국가들

은 미국의 주도력을 인정했다.

그런데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는 동안 다른 서방 국가들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며 경제력의 상대적 분포에 변화가 생겼다. 서독과 일본이 크게 성장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이 빠르게 부상했다. 세계 질서가 전보다 더 다극화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세력권 바깥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의 뜻대로 하기가 더 힘들다. 중국은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빠르게 증대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이렇게 요약했다. “중국은 우리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자금으로 유능한 군대를 건설하고 있다.”

이처럼 시야를 넓혀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패권 경쟁과 미·중 무역 갈등을 봐야 한반도 정세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한반도 정세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경쟁과 불안정의 구조 가운데 있다.

## 시행 반 년도 안 돼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파업을 예고한 신임 의사협회 회장이 협회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파업을 유보했다. 골수 우파로 알려진 의사협회 회장의 반발만 보면 ‘문재인 케어’가 엄청난 보장성 강화 정책인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킬 정도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62퍼센트 수준인 보장률을 임기 중에 70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신설해 비싼 의료비의 주범으로 지목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시 정부가 홍보한 것처럼 ‘획기적’이지는 않았지만 이 조처로 병원비를 어느 정도 낮출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검사나 치료를 뜻하는데, 그러다 보니 병·의원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한다. 같은 검사나 치료라도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다. 초음파 검사, 1~2인실 입원비, 일부 신약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건강보험 공단은 ‘꼭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급여로, 나머지를 비급여로 분류해 왔다.

반면 급여는 건강보험이 일정 비율을 지원하므로 정부(건강보험공단)가 그 가격을 통제한다. 예비급여는 지금까지 비급여로 분류되던 검사나 치료를 일단 급여에 포함시키되 그 보장률은 급여 항목보다 낮게 하는 조처다. 즉, 건강보험이 당장 진료비 대부분을 지원하지는 않아도 가격을 정해서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예비급여의 보장률이 10~70퍼센트로 얼마 되지 않아도 정부가 건강보험 기준 가격을 책정할 때 기존보다 낮게 책정하면 일부 환자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 들 수 있다. 신임 의사협회 회장이 입에 거품을 문 까닭이다.

문제는 보장률 목표치 자체가 매우

낮다는 데 있다. OECD 나라들의 평균 의료비 보장률은 80퍼센트 가량 된다. 또, 예비급여로 포함시킨 항목들을 급여화할지 말지는 3~5년 뒤에 결정하겠다는 미뤄뒀다. 정부 재정 지원을 늘리지 않는 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피하려면 장차 건강보험료를 크게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4월 2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효과와 효과가 입증되지 않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항목은 급여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물론 이런 비급여 항목은 대부분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박능후 장관은 퇴출이 아니라 계속 비급여로 남겨 병원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의 목표는 1년도 안 돼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보면 이런 보장성 강화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제약회사 등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고 의료비를 크게 인상시킬 수 있는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에는 신약·신의료기기 규제 완화 조처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책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것들이다. 핵심은 민간보험사, 의료기기 회사,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 환자들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것이다.

진정으로 환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의료 시장을 내맡겨선 안 된다.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의료 ‘산업계’의 이윤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산업 활성화’ 대책은 중단돼야 한다.

김재현

## 끝나지 않는 겨울을 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사오리 일본인 유학생

최근 대학원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다. “노동계급의 가장 억압받는 부문이 처한 상황은 언제나 자본주의의 가장 추악한 얼굴을 보여 준다”는 토니 클리프의 말이 고스란히 입증되고 있다.

### 국내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출신 사람들 중에는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이 많다. 한 시리아 여성은 “시리아 국민 중 누구도 자기 친척이나 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

많은 무슬림이 이런 트라우마를 겪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이 절실하지만, 상담은커녕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한다.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

(ISIS) 문제가 터진 뒤에는 이슬람 혐오 또는 공포가 커져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급증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을 쉽게 본다. 아이들은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 예법상 무슬림은 사망하면 사원에서 장례 예배를 받는데, 최근에 짜인 관을 보면 크기가 다 작다. 실제 무슬림 묘지에 가면 아이들 묘가 대부분이다. 21세기 한국에서 돈이 없어 못 먹고 병원에 못 가 아이가 죽는 일이,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드문 일이 아니다.

###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미등록 여성 노동자

기계 자수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 미등록 여성 노동자를 만났다. 스무 살에 한국에 와 40대 중반이 됐다. 한국에 산 지 20년이 넘었으나 ‘불법체류자’로 숨어 지낸 탓에 한국말을 거의 못 했다. 그녀는 마치 챔피언 벨트처럼

복대를 차고 있었다. 젊음을 한국의 공장에 바치다 얻은 허리 부상 때문이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아주 건강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면서 이중 삼중의 굴레가 그녀의 건강을 갇아먹었다. 아파서 하루라도 쉬라치면 사장은 자른다고 위협했다. 또,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 먹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20년을 버티고 버틴 끝에 허리를 더는 쓸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몸을 움직일 수 없던 어느 날, 친구를 통해 겨우 자선단체와 연결돼 병원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다. 겨우 몸을 추스르고 공장에 돌아왔지만 기숙사 방은 잠겨 있었다. 사장은 단호하게 나가라고 했다. 그녀는 그렇게 산재 인정은커녕 치료비 한 톨 받지 못했다. 결국 복대를 차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40대 초반 몽고 출신 미등록 여성

노동자는 2011년 몽고에서 뇌혈관 문제 진단을 받았다. 몽고에서는 치료가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의료관광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해 여기저기 의료기관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비싼 수술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불법체류자’가 됐다. 치료비를 벌고자 일을 시작했는데 단속을 피해 모텔에 취직했다. 쉬는 시간 없이 12시간 동안 일했다. 점점 심해지는 마비 증상과 불면증을 참으며 손님들의 방을 치웠다.

그렇게 7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수술은커녕 간단한 검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자신의 머릿속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 불안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 여전히 겨울을 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나 역시 잠시 미등록 신분이었던

적이 있다. 길지 않은 기간이었는데도 의료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치아가 아파도 손가락이 빠져도 보험이 안 돼 비싼 게 뻔한 치료비가 무서워 참아야 했다.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았을 때는 병을 키웠다며 결국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했다.

최근 신문을 보면, 헌법을 개정하면 건강권이 기본권이 될 거라 하고 ‘문재인 케어’를 하면 비급여가 없어질 거라고 한다. 그렇게 뿔뿔히 의문이지만, 된다 한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고향보다 먼 얘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해 온 활동가들은 실제로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들에게엔 여전히 병원이란 쓰러져야 갈 수 있는 곳, 아니 쓰러져도 갈 수 없는 곳이다.

한반도에 ‘봄’이 왔다고들 하지만, 이처럼 내가 만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겨울’을 살고 있다.

##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 사회 변화 위한 노동자들의 잠재력에 주목한 혁명가

5월 5일은 카를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이다. 마르크스는 무엇보다 세상을 바꿀 노동자들의 힘에 주목했다고 **세이디 로빈슨**은 설명한다.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핵심이라고 봤다. 독일에서 태어난 혁명가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을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이라 불렀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한 결과,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를 깨닫게 됐다. 그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분단선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그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가들은 기업, 공장, 기계 같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자본가들에게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신세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상품으로 만든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창출한 가치보다 적은 몫만을 임금으로 받는다. 이런 착취가 자본가와 노동자가 맺는 사회적 관계의 핵심이다.

이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지만,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부여한다.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성공적으로 착취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하기를 거부하면, 전체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 있다. 노동자들은 다른 계급과 구별되는 집단적 힘이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자본주의를 멈추는 것 이상도 할 수 있다. 착취가 완전히 사라진 사회,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이 인류 역사에 가득하다고 설명했다.

계급투쟁은 인류 역사의 원동력으로 사회가 전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바

뀌는 길을 열어 왔다. 예를 들어, 부르주아(또는 자본가들)는 자신들에 앞서 세계를 지배했던 봉건 영주와 비교하면 혁명적 계급이었다.

자본주의는 엄청난 생산력 발전을 가져왔다. 이런 생산력 발전은 근본적 사회 변화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일단 자본주의가 지배적 체제가 되자, 부르주아는 더 이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 구실을 하게 됐다고 마르크스는 설명했다.

“특정 발전 단계에 들어서면, 사회의 물질적 생산력은 기존의 생산관계와 충돌한다. 이제 생산관계는 발전의 정수에서 그 족쇄로 변하게 된다.”

## 잠재력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오늘날 보고 있다. 자본주의는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기도 남을 경제적 잠재력을 창출했다. 하지만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생산 조직 방식은 이런 잠재력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이 이런 사회를 쏙아 버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수립할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프롤레타리아만이 진정한 혁명적 계급이다.”

그들이 노동자들을 그저 관찰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자들로 이뤄졌고 노동계급 투쟁에 중점을 둔 조직의 설립을 돕고 그 일부로 활동했다.

그 덕분에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대의를 도모하는 데 갖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공산당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노동자 조직은 “노동자들 간의 경쟁으로 무너지기 일쑤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노동자들만이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많은 학자들이 그를 곡해하지만, 마르크스는 분명 국제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을 위해 실천한 인물이다

굽히지 않았다. 다른 누구도 노동자를 대신해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이 “대자적 계급”, 즉 자기 계급의 이익을 깨닫고 이를 위해 싸우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혁명의 과정은 세계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세계를 만든 노동자들도 변화시킨다.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해서만 노동계급이 “시대의 오물을 털어 낼 수 있으며, 자신들이 건설하는 새 사회에 걸맞게 거듭날 수 있다”고 썼다.

오늘날 노동계급은 세계 인구의 다수를 차지한다. 1848년 《공산당 선언》이 출판됐을 때는 노동계급이 극히 소수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노동계급이 착취와 계급 분단을 영원히 종식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 세계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87호 / 번역 김지혜

## 마르크스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책

**처음 만나는 혁명가들: 마르크스, 레닌, 룩셈부르크, 트로츠키, 그람시**  
마이크 곤살레스, 이언 버철, 샬리 캠벨, 에스미 추나라, 크리스 뱌버리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352쪽, 14,000원

카를 마르크스를 포함해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혁명가 다섯 명의 생애와 사상을 간략히 소개한다. 마르크스가 아닌 혁명가들도 다루지만,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 이루어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원칙을 평생 고수한 혁명가들의 삶과 투쟁에서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다.

## 마르크스 평전

프랜시스 윈 지음, 정영목 옮김, 푸른숲, 587쪽, 20,000원

영국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프랜시스 윈이 쓴 이 책은 지배자들과 우익의 악다구니와 비방에 맞서 마르크스에 크게 공감하며 ‘인간 마르크스’를 보여 주려 애쓴다. 단,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과 방법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악점이 있다.

##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알렉스 캘리니코프 지음, 정성진·정진상 옮김, 책갈피, 320쪽, 11,000원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프의 책. 마르크스주의 입문 필독서로 꼽힌다. 마르크스의 생애와 사상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쉽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곰곰이 사색하면서 읽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재벌가의 ‘슈퍼 갑질’은 자본의 생리

김민식

이번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다.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의 막내(조현민)가 벌인 ‘물벼락 난동’이 세상에 알려졌다. 뒤이어 조양호의 처(이명희)가 한 폭언도 폭로됐다. 이미 큰딸(조현아)의 ‘팡팡 회향’과 큰아들(조원태)의 70대 여성 폭행 등이 있었다. 구제불능의 ‘재벌 갑질 가족’이다.

그런데 재벌의 ‘슈퍼 갑질’은 비단 한진그룹만의 얘기가 아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평범한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짓밟는 행위를 하다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재벌들이 수도룩하다. 안하무인, 분노조절장애, 특권 의식에 걸맞으면 사람 무릎 꿇리기, ‘뺨값’ 폭행, 돈을 써 사람을 납치·감금·협박하기 등.

이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소시오패스다.

이런 재벌의 횡포, 탐욕, 부정부패에 대중의 분노가 엄청나다. 반기업 정서는 세계적 현상이지만, 한국의 반기업 정서는 특히 높다.

‘금수저’ 출신 재벌 3세들이 문제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한겨레〉에 실리곤 한다. 창업주나 2세대들에 비해 특권 의식이 강해서라는 것이다. 피상적 관찰이다.

## 제국주의와 독재 정권

한국 재벌은 처음부터 제국주의·독재 정권과 유착했다.

재벌의 본원적 자본 축적은 일제의 적산이었다.

해방 직후 일제가 남긴 적산은 당시

국내 총자본금의 91퍼센트였다. 초기에 적산은 노동자들이 관리했다(노동자 자주관리 운동). 그러나 미 군정은 이를 총칼로 강탈했다. 남한을 확실하게 자본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미 군정은 노동자들에게서 빼앗은 적산을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에 넘겨줬다. 이승만 정권은 은행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자신들과 결탁해 있는 자들에게 적산을 헐값에 불하했다. 거의 장물 배분 과정이나 다름없었다.

이 덕분에 일제 시대부터 장사를 하던 자들—삼성 이병철은 정미소와 양조업, 현대 정주영은 쌀가게, 럭키금성(LG, GS의 전신) 구인회는 포목상을 했다—이 이제 노동자들을 고용해 이윤을 뽑아내는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경

제 개발(자본 축적)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위해 부정 축재자로 잡아들였던 자본가들도 풀어 줬다. 은행 돈을 거저 대출해 줬다. 해외 차관도 몰아 줬다. 국영기업도 넘겨 줬다. 대한항공을 10년 분할 지불 조건으로 한진에 준 것도 이때(1969년)였다.

재벌 형성에서 단연 중요했던 것은 노동자 착취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부정·부패한 ‘재벌 갑질’은 재벌 3세와 4세의 일탈이 아니다. 이미 재벌 형성 초기부터 있었다. ‘재벌 갑질’이 한국만의 특수성(예외주의)도 아니다. 한국 재벌의 지배 구조(경영 세습 등)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더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계급도 매우 무자비하다. 오래전에 서구 지배자들은 농민을 토지에서 쫓아내고(인클로저), 20세기에 식민지 쟁탈

전을 벌이며 수많은 사람을 살육했다. 그래서 카를 마르크스는 일찍이 자본주의가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 나타났다고 했다.

자본가는 ‘살아 숨 쉬는’ 자본이다. 자본의 생명은 축적이다. 축적을 위한 경쟁은 자본가들의 행동과 심리를 결정한다. 탐욕, 이기심, 이윤 추구 등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래서 횡포와 무자비함은 자본가들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요구되는 ‘자질’이다.

사실, 해외에 ‘재벌 갑질’이 없다는 주장은 트럼프를 무시하는 것이다.

요컨대, ‘재벌 갑질’은 이윤 지상주의적인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재벌 갑질’에 대한 매우 마땅한 반감이 자본주의 체제를 향해야 하는 이유다.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의 대공장 노동운동 혁신 제안

# 정규직 양보와 노사 협조주의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박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하부영 집행부가 “대공장 노동운동이 변해야 한다”며 정규직의 임금 양보(연대임금),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 협조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 등 포퓰리즘 언론은 하부영 지부장을 추켜세우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물론 현대차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선 그만한 호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 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만연한 ‘실리주의’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조합원들의 “반대와 부결을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돈키호테에 비유했다. 17세기 초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의 주인공 돈키호테가 추구한 가치들, 즉 명예·기사도 정신·고결함·용감한 행위를 오늘날에 구현한다면 하 지부장과 정반대로 매우 투쟁적이고 급진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 하 지부장의 연대임금론: 임금 투쟁 회피하는 노조 지도자의 변명

하부영 집행부는 “하후상박 연대임금”을 내세우며 금속노조와 함께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내용인즉, 현대차지부의 임금 요구를 낮추는 대신 현대차 사측에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임금 지원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하후상박을 위한 연대 자체는 노동운동의 훌륭한 전통이다. 하지만 하 지부장에게만 미안하게도 상향평준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만 그 진정한 정신이 실현될 수 있다. 하부영 지부장이 제안하는 행동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우선, 그의 “연대임금” 제안은 현대자동차 노동자 투쟁 전통에 대한 폄훼에서 시작된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30년 투쟁이 사회 양극화(혹은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러나 이 말은 참말이 아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다른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도 참이 아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조건을 개선하면 중소기업·하청 노동자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조건도 동반 상승한다.(표 참고)

현대차나 주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여전히 일종의 기준 설정자 구실을 한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매년 현대차의 임금 인상률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이드라인 삼아 나머지 부품사·하청업체의 임금 수준도 결정된다.

잘 조직된 노동자들이 싸워서 성과를 내면, 그것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자신감을 준다. 한 부문의 임금 인상 투쟁이 나머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먹여 들어가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투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부영 지부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실리주의’

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은 임금 투쟁을 회피하려는 노조 지도자의 자기 정당화일 뿐이다. 또, 그동안 대기업 노조 지도자들의 핵심 문제는 그들이 자기 조합원을 위해서든 중소·하청 노동자를 위해서든 실질적으로 싸우지 않은 것인데, 마치 임금 투쟁이 문제였던 것처럼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지난 3년의 경험을 봐도 이 점이 잘 드러난다. 지도부가 불필요한 타협을 해 현대차 임금 인상률이 억제되자, 자동차 부품사·하청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도 더 어려워졌다. 금속노조와 완성차지부 지도자들이 부품사의 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 투쟁 등에 연대하기를 회피한 것도 격차의 유지·확대에 일조했다.

이런 사실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요구를 자제하자는 연대임금론(양보론)이 나머지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역효과를 낼 뿐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하부영 집행부는 사측에 부품사·비정규직을 위한 “특별 요구”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 불황 속에서 “임금 인상 투쟁은 생명을 다 했다”며 자기 조합원들을 자제시키는 하 지부장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 묶을 파내기 위해 단호하게 싸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기껏해야 대의 명분을 앞세워 협상의 묘를 살려 보겠다는 것일 텐데, 사측은 지난해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 지도부가 내세운 일자리연대 기금 제안도 단칼에 일축해 버렸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하부영 집행부의 연대임금은 “하후상박”이 아니라 노동자들 모두의 임금 수준을 끌어내리는 ‘하박상박’이 될 공산이 크다. 그것은 투쟁으로 사용자를 강제할 힘을 가진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단결을 저해하는 반면, 사용자만 이롭게 할 것이다.

## 기업 경쟁력 협조 정책은 “혁신”이 아니라 (불행한) 추세

한편, 하부영 집행부가 제안한 또 다른 “혁신”은 고용을 지키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협조한다는 것이다. 하 지부장은 신차 적시 생산, 품질 향상 등 사측의 요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고, 자동차 판촉 활동에도 나섰다. 사실 대기업 노조들은 점점 이런 방향으로 기울어 왔다. 경쟁력 협조도, 자동차 판촉 활동도 전혀 새롭지 않다. 노사 협조는 “혁신”이 아니라 지속돼 온 문제일 뿐이다.

일부 노동자들은 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냉엄한 진실은 사측이 노조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이 이윤 증대에 있고, 특히 지금 같은 장기 불황기

에는 노동자들에게 조건 하락을 양보 받는 것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노동자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착취하느냐와 직결돼 있다.

사실 하부영 집행부가 사측의 경영 고민을 함께 나눠지려는 출발점 자체가 노동조건 지키기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첩경이다. 참 안 어울릴 것 같은 그의 연대임금론(사실은 임금 투쟁 회피)과 노골적인 노사 협조주의가 실제로는 한쪽인 이유다.

현대차지부가 올해 초 사측과 체결한 ‘창립 50주년, 노사관계 30주년 특별합의’는 경쟁력 협조 정책의 위험성을 잘 보여 준다. 하부영 집행부는 신

차를 적기에 뽑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기층 대의원들이 갖고 있던 협상 권한을 약화시키는 데 합의했다.

현대차에서는 라인에 신차가 투입될 때마다 크고 작은 투쟁이 벌어져 왔다. 사측은 어떻게든 노동강도를 높이고, 외주화를 확대하길 바라고,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단협에 명시된 대의원의 협상 권한을 이용해 투쟁했다.

하부영 집행부의 ‘특별합의’는 노동자들의 현장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사측이 현장 통제력을 강화할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사측은 언제나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현장 통제력 강화를 바라 왔다.

## 민투위 소속 일부 집행 간부들의 도덕적 퇴행과 우경화

노사 협조주의는 민주노조운동이 지켜 온 노동계급의 규율과 투쟁 정신을 흐트러뜨릴 위험도 크다.

최근 알려진 하부영 집행부의 도덕적 퇴행이 이를 보여 준다. 현대차지부 여성실장과 조직국장이 집행 간부를 사퇴하며 폭로한 바에 따르면, 하부영 집행부는 임단협 협상을 앞두고 무원칙하게 사측과 술자리를 가지며 “화합”을 다졌다.

이 자리에 수석부지부장, 조직실장 등이 참석했다. 하부영 지부장이 이를 알고도 용인한 점을 보면 단순히 일부 개인들의 문제가 아닌 듯하다. 하부영 집행부가 노사 협조주의로 나아가며 사용자에 대한 경계심이 풀려져 빚어진 일이다.

하부영 지부장은 노조 규율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측과 술자리를 가진 핵심 간부를 임단협 교섭위원으로 선임해 또 다시 우려를 사고 있다. ‘이전 집행부들도 해 온 관례적인 상견례 아니냐’는

식의 태도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물론 이전 집행부 성원들도 다수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현대차 공동행동’이 주도하는 1공장의 좌파 집행부·대의원들도 신차 협상을 앞두고 사측과 회식을 해 조합원들의 실망을 자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관행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흔히 회식, 술자리는 사용자들이 노조 간부들을 회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그것이 관례처럼 되면, 노조 간부들은 관리자들과 어울려 고급 식당에 드나들고 대우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기층 조합원들로부터 점차 멀어져 타협의 압력을 받기가 쉬워진다.

하부영 집행부가 한때 좌파였던 현대차 민투위가 배출한 집행부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주는 씁쓸함은 더 크다. 사측과 술자리를 함께 한 당사자도 민투위 소속 활동가들로 알려졌다.

민투위는 2015년 현대차 1공장의 안전 사고 대응 투쟁을 패배로 이끈 이

후 분열하면서 온건파가 주도권을 쥐었다. 지난해에는 비슷한 온건파인 하부영 씨와 통합해 노조 집행권을 잡았다. 그리고는 민투위가 전에 비판했던 정규직 양보론과 노사 협조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민투위의 우경화는 노조 집행권 장악을 목표로 활동한 노조 좌파들이 겪어 온 결정적 문제점을 잘 보여 준다.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투쟁과 연대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집행권 장악에 매달리면서 기회주의적 타협에 젖어들과 좌파적 원칙을 하나둘씩 저버리며 온건화한 것이다. 그들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유물론적 분석을 알아야만 한다.

전투적 활동가들은 맹목적인 좌파 집행부 세우기가 아니라 현장 조합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단지 유권자나 선거구가 아니라 투쟁의 동력으로서 말이다. 그런 역학이 가능하려면 소수이지만 원칙있는 혁명가들의 조직을 기층에서부터 건설해야 한다.

해고자 복직, 강제 전보 철회, 삭감당한 임금 보전

# 세종호텔노조 투쟁은 계속된다

박춘자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세종호텔에서는 '노동 적폐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갖은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사측이 구조조정에 결림돌이 되는 세종호텔노조를 표적 탄압하기 때문이다.

강제 전보를 거부한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신설 파트를 만들어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만 전보했다. 이미 외주화된 로비 청소에 객실 청소 경력 10년, 20년이나 되는 룸 어텐던트를 보냈다. 심지어 어느 호텔에도 없는 '조리지원' 파트를 만들어 경력이 10년도 넘는 전문 셰프들을 채소를 다듬거나 기물을 닦는 업무로 하향 전보를 하기도 했다. 그중 두 명은 세종호텔노조의 간부들이다.

또, 사측은 성과연봉제를 이용해 세종호텔노조 조합원 대부분의 임금을 삭감했다. 30퍼센트 넘게 삭감된 조합원들도 있다. 세종호텔노조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 단박에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종호텔노조는 이런 공격에 맞서서 지난 8년 동안 현장을 조직하고, 매일 홍보전과 매주 목요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촛불 운동이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그 여파로 정권이 교체되는 분위기와 맞물려, 세종호텔노조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도 연이어 발표됐다.

이런 사회적 압력 때문에 지난주에 사측이 교섭 자리에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해고된 김상진 전 위원장의 복직 요구를 거부했다. 사측은 오랫동안 투쟁을 이끌어 온 김 전 위원장이 복직하면 '노동자들이 사측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은 '김 전 위원장이 복직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구조조정

세종호텔 사측은 호텔이 곧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도 시설 투자는 끊임없이 했다. 반면, 노동조건은 계속 악화시켰다. 정규직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 비정규직에게는 성과연봉제에 휴일·연장 수당을 포함시켰다.



집요한 공격, 끈질긴 투쟁 세종호텔 노조는 매주 목요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집회를 연다

결국 사측이 말하는 "경영"은 구조조정과 임금체계 개악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술책이다.

현재 호텔업계의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10년 사이 콘도·펜션 등 다양한 숙박업 형태가 등장하고, 비즈니스 호텔도 증가했다. 우리 나라 서비스 산업 내 개인서비스업 비중(13.1퍼센트)은 주요 선진국(OECD 평균 9.3퍼센트)에 견줘 꽤 높은 편이다.

통계청 자료 기준 호텔산업 매출액은 2006년 대비 현재 2조 원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시기 인건비는 거의 정체 수준이었다. 호텔업에서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외주화를 확대해 간접고용을 급속히 늘렸다. 결국 호텔 산업 구조조정은 인력 구조조정을 동반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호텔 사측은 집요하게 세종호텔노조를 공격했다. 이명박

정권의 비호 속에 복귀한 부패한 경영자가 복수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조에서 조합원을 빼내려 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권으로 강제 전보를 단행하고, 이에 저항하면 해고했다.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모든 직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세종호텔노조는 구조조정 압박과 외주화, 고용 축소,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삭감 등과 마주해 싸워 왔다.

세종호텔노조의 투쟁은 자본이 어떻게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지, 그에 맞선 노동자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싸울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우리의 투쟁은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서 노동자들이 벌이는 싸움 중 하나이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투쟁이다.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을 시작하다

장호중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분회)는 4월 19일 서울대병원 로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병원을 규탄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 약속을 병원 측이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파업을 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상당 부분 쟁취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빼앗긴 임금과 복지도 일부 돌려받았다.(관련기사: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승리,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

당시 서울대병원분회와 병원 측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논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도 2018년 1사분기 이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대상이 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청소, 경비, 시설, 식당 등)는 서울대병원 본원과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을 포함해 약 800 명에 이른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병원 측은 노동자 측 대표단 12명 중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간부 3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협의기구 구성을 거부했다. 병원 측은 정부 지침에 '상급 노조도 협의기구에 참가시키라'는 명시적 내용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서울대병원 측은 노동부가 '상급단체도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노동부는 묵묵부답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교육부가 전략기관으로 선정한 다른 국립대병원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눈치보며 시간을 끌고 있는 듯하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 측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 방식으로 채용하거나, 별도직군을 만들고 표준임금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쁜 노동조건을 고착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지난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부 가이드라인의 허점을 이용해 '채용 심사' 등 꼼수를 쓰려 한 바 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분회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병원 측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들레분회는 거의 매일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에 병원 로비에서 홍보전을 하며 병원 측이 당장 합의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연대해 온 소중한 전통이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번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

## 노동자 연대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 기사가 수시로 웹사이트에 올라옵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노동자 연대"로 검색 후 설치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를 검색하고 구독! "먼저 보기" 설정해 주세요. (fb.com/wspaper.org)



**텔레그램**  
텔레그램에서 "노동자 연대 알리미" 검색 후 시작 버튼! (@wspaperbot)  
※ 아이폰 사용자는 페이스북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해 주세요.

**wspaper.org**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이메일

소속 (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교회 | ☐ 기타 )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18번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 맑시즘2018

7월 19일(목) ~ 22일(일) |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 나홀간의 토론의 장 • 차별과 불평등, 착취에 반대하는 토론
- 청중 발언 시간 보장 • 노동자들과 청년·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토론

참가신청·문의 **marxism.or.kr**

※ 웹사이트에서 참가비를 확인하고 참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marxism@marxism.or.kr

노동운동 관련 주제들

## 계급

- 계급이란 무엇인가? 여전히 중요한가?
- 한국의 노동계급 — 어떻게 변해 왔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가?

## 노동조합

- 노동조합과 개혁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자들
- 문재인 시대 노동조합, 파트너십을 추구해야 하는가?

##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 '4차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꿔 놓을까?
-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 어떻게 봐야 하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나?

##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운동 쟁점과 투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약속 1년 —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투쟁과 과제
- 정규직화를 둘러싼 노동조합 내 반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소득주도성장론 — 속 빈 강정인가, 삶을 향상시킬 대안인가?
- 구조조정과 노동운동의 대안 — 상반기 구조조정 대응을 돌아보며
- 조산업 위기와 저항 — 민주파 집행부 등장 이후 현대중공업 투쟁
- 직무급은 공정하고 평등한 임금인가?
- 연대임금 정책 — 격차 해소하고 단결 강화할까?
- 누더기 주 52시간제 시행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들
- 근무시간이 유연해지면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통제권을 갖게 될까?
- 경영참가는 작업장 민주주의를 보장할까?
- 일터에서 죽음에 내몰리는 노동자들 — 산업재해와 저항
- 왜 간호사들은 '태움'에 내몰리나 — 병원의 현실과 간호사 노동조건

그 밖에도 **제국주의와 한반도 주변 정세, 문재인 정부와 한국 정치, 마르크스 탄생 200년, 여성 차별에 맞선 투쟁, 중국, 한국 현대사와 민중 저항사, 교육, 심리학, 종교** 등을 주제로 70여 개의 워크숍이 열립니다. 웹사이트(marxism.or.kr)에서 더 많은 주제를 확인하세요.

따라서 선거에 기대치 말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고 분열하는 상황을 이용해 단호하게 투쟁해야 한다. 그러면 정치적 초점을 형성하면서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